북핵 사태와 우리의 대응:

對北 能動抑制와 海上戰力

1. 北核 사태의 原因

1) 세 가지 無知

(1) 北韓에 대한 無知 / 타협 不能의 神政國家' 이해 부족

(2) 國際政治에 대한 無知 / 韓美同盟에 대한 過信, 中國의 협력 과신

(3) 韓國 位相에 대한 無知 / 허약한 쓸 수 있는 힘'

Power = will × strategy × capability

will / 국론 분열, 피해 감수 의지 부족, 先私後公

strategy / 大戰略 결여, 4세대 전쟁에 2세대 전략

capability / 전략과 연계되지 않은 능력

* 國政운영체제의 문제

2) Negative Strategy

(1) 방어적 목표 / 성공하면 현상, 실패면 불리한 변화

(2) 未來' 희생한 현실' 안주 / 닥칠 위기 외면

(3) 시간이 우리 편이라는 착각 / 북한 자멸만 기다리는 방심

* 사태 해결의 主導權 상실

2. 군사적 대응 : 능동적 억지(Proactive Deterrence)

1) 목적

(1) 不戰而屈人之兵而 善之善者也

(2) 확실한 군사우위 확보

* 한국 주도의 統一' 조건 확보

2) 목표

(1) 북한의 戰意 분쇄(伐謀)

(2) 북한과의 共存 제도화(적대적 共存 -> 平和共存)

* 先爲不可勝 以待敵之可勝 상황 만들기

3) 戰略

(1) 北韓 戰力의 先制的 無力化

(2) 非核的 수단에 의한 공격 능력 확보

* 북한의 武力해방 의도 포기하도록 유도

4) 所要戰力

(1) Detect / 다양한 정보 획득 자산

(2) Disrupt / 고도의 전자전 능력

(3) Destroy / 신뢰할 수 있는 PGM, Kill Chain

(4) Defense / KAMD, 신뢰할 수 있는 거점방어체제

* 한국 우위의 國力으로 확보 가능

5) 戰場 주도

(1) 主戰場을 북한 지역으로

(2) 5次元 공간 / 地, 海, 空, 우주, 사이버공간

* 전쟁기획 수정으로 가능

3. 능동억지를 위한 海上戰力 구축

1) From the Sea 戰略

* 능동억지전략의 최적 지리적 조건

2) Sea-based 戰力

* 자원의 재구성으로 확보 가능

3) 소요전력

(1) 해상통제 능력

(2) Mobile Landing Platform , 연안전투함정

(3) 함대지 missile, 유무인 항공 전력 및 해상, 해중 전력

(4) 해병, SEAL, UDT, 항공전력 등 特戰 능력 확충

(5) 복합군수 지원 함정 확보

* 현재의 잠재 능력으로 구축 가능

4) 합동군 조직

* 서해북부사령부', 동해북부사령부' 검토

4. 맺는말

1) 시대흐름을 반영한 앞선 대비' / 栗谷의 更張論

2) 形'보다 勢'에 주목 / 無形戰力 강화에 중점

3) 孫子의 五事(道, 天, 地, 將, 法)'에 비추어 反省

4) 五能(智, 信, 仁, 勇, 嚴)'을 갖춘 장성의 양성

□ 참고자료 : 對北政策 能動的 政治, 安保정책'으로 다시 짜자"

참고자료

對北政策 能動的 政治, 安保정책'으로 다시 짜자

북한의 네 번째 핵실험과 뒤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보고 나서야 정부와 국민이 북한 위협 실체에 대하여 모두 놀라고 있다. 궁핍한 북한을 도와주면서 잘 이끌면 우리가 주도하는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환상이 흐트러지면서 우리 정부는 당황해하고 있다. 통일대박'의 꿈이 국가 안위의 위기로 급전직하하면서 우왕좌왕하고 있다.

세 가지 무지(無知)가 가져온 비극

세 가지 무지가 오늘의 비극을 자초했다.

첫째는 북한에 대한 무지다. 북한을 정상국가로 잘못 알고 있었다. 정상국가란 국제규범을 지키고 자국의 국민의 안위를 챙기는 국가이다. 북한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 북한은 김일성 주체사상'이라는 이념을 앞세운 신정국가(神政國家)이다. 이 체제이념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민의 안위와 복지는 언제라도 희생할 수 있는 종교 국가이다.

북한은 북한 주도의 통일을 포기할 수 없다. 국가존립 목적 자체가 김일성주의' 국가의 완성이기 때문에 통일을 위한다고 이념과 체제의 변형을 수용하는 타협을 할 수 없다. 협상을 통한 통일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우리는 북한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왔다. 국민총생산이 우리의 40 분의 1 밖에 안 되는 궁핍한 나라여서 우리와 맞싸울 수 없을 것이라 착각해왔다. 북한은 국민의 1 할만 먹여 살릴 수 있으면 살 수 있는 나라다. 나머지 인민이 아무리 어려운 삶을 살더라도 흔들림 없이 버틸 수 있는 전제적 통치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민의 반이 희생되는 전쟁도 감수할 수 있는 나라다.

둘째로 국제정치의 작동 원리에 대한 무지를 들 수 있다. 모든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여 챙긴다. 다른 나라를 위해 자국 이익을 희생하는 국가는 없다. 우방을 돕는 것은 그 우방이 자국 이익에 도움을 줄 때 뿐이다. 미국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국미의 이익을 희생하지는 않는다. 우리의 존재가 미국 이익에 도움 될 때만 우리와의 동맹을 존중한다. 북한이 핵무기로 우리를 공격할 때 미국이 자국 국민의 희생을 감수하고 우리를 지켜 주리라 생각하면 착각이다. 미국의 핵우산을 과신하여서는 안 된다. 평시에 의전적인 예우를 받았다고 그 나라를 우리 편으로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다. 중국의 국가이익에 어긋날 때는 중국은 언제라도 우리를 적으로 밀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셋째는 우리 자신에 대한 무지이다. 한국은 G-20의 하나로 올라선 경제선진국이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성공한 나라'라는 자부심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군사력도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강국이라고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숫자상의 평가다. 국제사회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power)은 의지(will)와 능력(capability)과 전략(strategy)을 곱한 것이다(P=W ×C ×S). 의지는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희생을 감수 할 수 있는 결의의 수준이다. 정치 지도 집단이 당파로 갈려 서로 싸울 때는 그 의지가 0*으로 된다. 능력은 목적 달성에 동원할 수 있는 체계적 역량인데 목표와 연계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없다. 전략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능력을 시간, 공간에 배분하여 운용하는 기획이다. 전략이 치졸하면 아무리 능력 요소가 커도 정작 나라를 지키는 데는 소용이 없다.

우리 군사력은 북한보다 처지지 않는다. 앞선 경제력으로 우리는 북한보다 나은 무기를 갖추었다. 그러나 전략이 후진적이어서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 오늘의 전쟁환경은 제4세대 전쟁'으로 바뀌었는데 우리는 제4세대 무기를 가지고도 제2세대 전쟁기획을 고집하고 있다. 북한은 제2세대 무기를 제4세대 전쟁에 맞추어 활용하고 있다. 우리가 북한보다 강하다고 자부할 수 있겠는가?

잘못된 대북정책의 문제점들

왜 이런 황당한 사태에 이르렀는가? 첫째로 국가의 장기 비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관된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 정책을 내어 놓아

혼선만 빚고 있다. '민족공동체통일론', '햇볕정책', '연방제통일론', '통일대박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이에 비해 북한은 김일성 시대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통일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핵무장으로 절대적 군사우위를 확보하고 남한 내에서 정치전을 벌여 한국에 친북 정부를 세워 통일을 이룬다는 계획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

더 큰 문제는 정부를 이끌어 가는 정당들이 국가이익에 앞서 자기 당의 지지 확보에 집착하고 있어 통일된 국가 의지를 만들어 낼 수 없다는 점이다. 시급한 국방개혁 과제들도 여야 투쟁 마당인 국회에서 필요한 입법 조처들을 해주지 않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독선적 자세도 문제다. 외교, 안보, 통일정책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맡겨야 제대로 만들어 갈 수 있는데 앞선 정부에서 일했다고 전문가들을 모두 배제하고 '참신한 신인'들이라는 아마추어들에게 정책의 수립, 실행을 맡겨 놓아 오늘날 같은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등의 국책연구소의 연구원들은 모두 몇 십 년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이다. 우리는 전문성 아닌 정부에 대한 충성도를 내세우고 비전문가들을 낙하산으로 연구소로 내려 보내고 있어 연구의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우리 사회 자체의 문제들이 쌓여 지난 20년 동안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새로운 대북정책과 관련한 몇 가지 제안

대북정책 과제 중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은 핵을 포함한 북한의 무력위협 제거다. 북한의 무력위협 아래서는 어떤 통일정책도 펼 수 없다.

북한의 무력위협에 대해서는 '능동적 억제전략(proactive deterrence)'을 세우고 실천해나가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 등을 사용하기 전에 무력화(無力化)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북한이 공을 들여 만든 무기들을 쓰기 전에 한국이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북한 스스로가 핵무기 등을 만들 생각을 못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영토 안에서 적의 침투를 막는다는 소극적 전략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주전장(主戰場)을 북한의 전 영역으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 유인, 무인 공격무기를 대량 확보하고 북한 전역에 전개할 수 있는 특전 전력을 강화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스라엘이 아랍제국의 포위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 나가는

지혜를 빌려 와서 한국 독자적 능동적 자위전략을 세워야 한다.

다음으로 확고한 자주국방 의지를 굳혀야 한다. 아무리 가까운 동맹국이라도 자주국방 의지가 없는 한국을 지원해주지는 않는다. 동맹의 도움을 얻는 것은 바람직하나 동맹에 국방을 의존하여서는 안 된다.

통일정책과 관련해서는 당분간 북한과의 타협으로 평화를 추구하려 해서는 안 된다. 독일은 접근을 통한 변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통일을 이루었다. 동독이 정상국가'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북한은 인민의 안위와 복지를 우선적으로 지키려는 정상국가가 아니어서 이런 정책은 시기상조다. 북한이 정상국가로 스스로 변신할 때까지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의 길이다.

새로운 통일정책은 다음과 같은 틀에 맞추기를 바란다.

첫째, 한국 주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 원칙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지키려는 대한민국의 생존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서의 생존이다.

둘째로 능동적 전략(positive strategy)으로 정책을 짜야 한다. 반공'이나 방어' 등의 수동적 전략(negative strategy)은 아무리 성공해도 현상을 넘지 못한다. 북한 대량살상무기의 선제적 제거, 북한의 민주화 등 투쟁의 주전장(主戰場)을 북한으로 옮기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능동적 정책이어야 한다.

셋째로 북한을 제압하기 위한 전략 전개를 위하여 국내에서 단합된 국민적 합의' 도출에 노력을 쏟아야 한다. 북한의 대남 정치전을 무력화(無力化) 시켜야 우리의 능동적 대북한 정책, 통일정책이 성공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 기회를 잘 살려 나가자.